

‘文 정부 3총리’ 회동 가능성… 이재명 행보 주목

김부겸·이낙연·정세균

정세균-이낙연 “당 문제 우려” 3총리 이번주 회동 이뤄질 듯 쇄신 시한 연말,李 결단 압박 당내 “사퇴 요구 현실적 어렵다”

문재인 전 정부 ‘3총리(김부겸·이낙연·정세균)’가 더불어민주당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며 이번주중 만날 것으로 보여 이재명 대표의 침묵 행보가 바뀔지 주목된다.

이낙연 전 대표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는 앞서 통합 비대위 구성 등 당 쇄신 시한을 ‘연말’로 못박고,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6일 종로구 모처에서 1시간 가량 만나 민주당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전 대표는 회동 후 입장문을 통해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와 민주당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두 사람은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전 총리 측도 ‘3총리 회동’에 화답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지난 24일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났는데, 그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간 만남) 우리가 먼저 다리 놔보면 어떻겠냐’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1월부터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번주중 ‘3총리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3총리가 당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통합 압박 수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간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 등 독자 행

보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수 있을 것이라 관측이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팬덤 정치 문화 개선이 필요하며 이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는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총리 회동이 당내 통합과 분열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혁신과 쇄신의 무풍지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전 대표와 비명계의 쇄신 요구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

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통합 비대위 구성’ 요구에 대해 “민주 정당에서 나올 법한 의견” 정도로 선을 그은 게 전부다.

당내에선 이 대표 사퇴와 같은 비명계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그렇다고, 당 혁신과 쇄신에 대한 이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은 오히려 당 분열만을 촉진시킬 것이라 지적이 높다.

결국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까지 나서서 통합과 혁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어떤 형식으론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尹 “어르신 건보료 부담 ↑… 불합리한 제도 즉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장 중심 민생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부 정책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목소리에 기반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의료·금융 등 각 분야의 정책 사례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은퇴 고령층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 재산·자동차 보험료과다 지적 등 민생 현장 호소를 소개하고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 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기 바란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행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 발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개호 “지역구 내년 예산 85억 신규 반영·증액”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장성 심뇌혈관센터 건립 3억3000만원, 함평 교통안전연수원 및 교육센터 건립 용역 1억원, 영광 e-모빌리티 관련 사업 45억원 등 4개군 12개 사업 85억원을 신규 및 증액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및 증액 반영된 이 의원 지역구 12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789억원이다.

지역민들의 삶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4개 군 37개 사업, 175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4개 군자치단체장과 함께 발로 뛰는 노력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며 “내년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큰 사업 발굴과 관련 예산 확보로 지역민들이 만족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준석 전 대표, 창당발기인 200명 이상 서명

내년 1월 중순까지 창당 완료

27일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신당 창당에 필요한 창당 발기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탈당 직후 신당 창당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는 최근 창준위 설립을 위한 발기인 200명 이상의 오프라인 서명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7일 오전 11시께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바로 창준위 설립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초·중순까지 신속하게 창당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여의도재건축조합’에서 “27일 창준위를 등록하고 온라인 당원가입 틀을 가동해 시도당별 1000명씩 5곳을 모아서 등록하면 기술적

으로는 5일 정도면 할 수 있지만 너무 급한 것 같으니까 27일에 선언하면 열흘에서 15일 사이에 창당을 완성하는 결과를 내보면 어떻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장 가입 대기 인원을 보면 3분의 1 정도가 당원 가입으로 이어지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금 당을 만들면 5개 이상 지역의 기반이 있어야 한다. 이준석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돈을 들이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벼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록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탈당만 하고 창당은 안 할 것 이냐고들 하시는데 탈당 즉시 창준위를 등록하려고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왔다. 바로 창준위 등록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한동훈 “내년 총선 지역구·비례대표 출마 안한다”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지역구나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오직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 개발 전체주의 세력과 결합해 자기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 민주당 이재명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우겠다”며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다”면서 “정부 여당인 우리 정책은 곧 실천이지 만 민주당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 당 대표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하자”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꾸자”고

당부했다. 또 “선당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선민후사’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이라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다”고 자신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점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우기도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사람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서실장에 ‘영남 초선’인 김형동 의원을 임명했다.

앞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재적 인원 824명 중 6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27표(96.46%), 반대 23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류희림 방심위원장 해촉·진상조사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관련, 가족·지인 동원 정부 민원 의혹을 제기하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심위에 접수된 이른바 ‘가짜뉴스 민원’의 상당 수가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등 가족과 지인 등이 제기한 것으

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독립기구 방심위를 용산 대통령실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켜 온 류 위원장이 용산의 뜻대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가짜뉴스’ 관련 발언 직후부터 지난 9월18일

까지 60여명이 총 160여건의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다”며 “민원인 절반 이상인 40여명이 류 위원장과 직, 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를 문란케 한 류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